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3호

베러 투모로우 / 서울스포츠

어두운 스포츠 문화를 걷어내는 일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스포츠 학폭과 갑질

쌍둥이 자매 등록 포기까지...갈팡질팡 여론 눈치만 본 흥국생명

장현구 연합뉴스기자

KBO 신인드래프트 점수...학폭 서약서·고교 생활부 제출

김희준 뉴시스기자

“학부모가 월급 주는데 감독이 왜 갑질 하나요?”

이준희 MBC뉴스

구단 ‘트레이드 갑질’ 이젠 끝...4개 스포츠 표준계약서 적용

조효석 국민일보기자

『도쿄올림픽』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 긴급사태 선포 가능성”
아베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는 反日 행위”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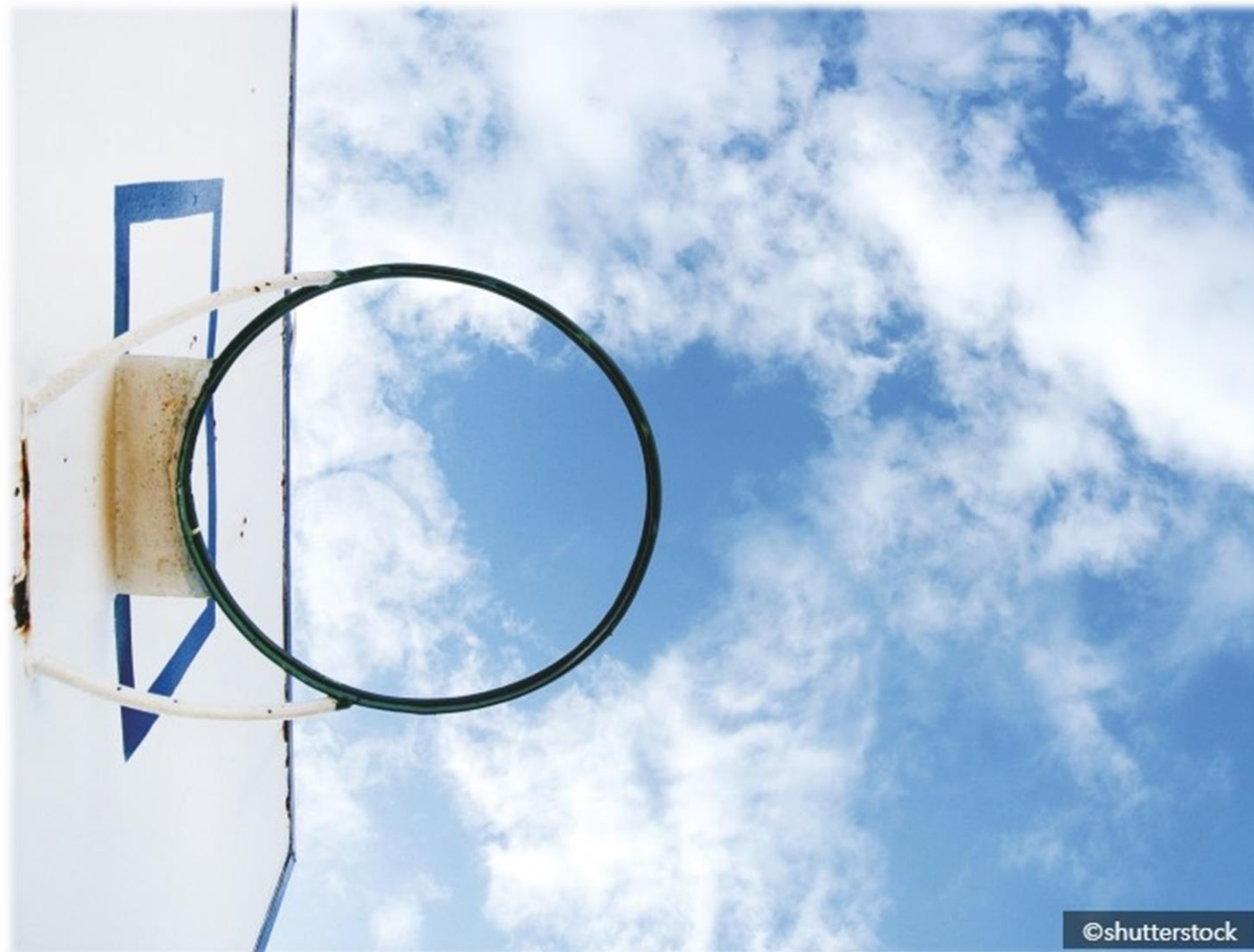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어두운 스포츠 문화를 걸어내는 일

틀어진 톱니바퀴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최근 한 광고가 화제다.
광고는 감독의 지시 아래 선수들이 단체로 '엎드려 뺨쳐'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한 어린 선수가 더 이상 벌 받기를 거부하고
당당히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어서 "달라지긴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난다. 이 광고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두운 스포츠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 · 홍덕기



인권침해의 온상, 합숙소

'섬' 문화는 학생 선수가 어린 나이부터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합숙소와 훈련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학교생활과 멀어져 고립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오랜 시간 '섬' 문화 속에 놓여 있었다. '섬'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 바로 합숙소다. 합숙소는 어린 나이의 학생 선수를 위한 초등학교 합숙소부터 성인 국가대표를 위한 진천선수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

문제는 운동부 합숙소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은 9명의 어린 학생 선수의 생명을 앗아가며 합숙소가 인권침해의 온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 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합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과 훈련의 효율성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여전히 변칙적 합숙을 행하고 있다.

폭력적 통제의 정당화 방식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학교운동부는 다양한 폭력적 통제 방식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말투나 인사 등 '예의의 과도한 강조'다. 예를 들어 선배에게 인사를 할 때 '다, 까'로 어미를 마치는 행위 등이다. 선배는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의바름'을 합리화하지만, 사실 이러한 통제 규정은 운동부 내 위계 및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둘째, '일의 전가'다. 합숙소 내에서 벌어지는 심부름, 빨래, 청소 강요 등이 대표적이며, 이 역시 공동체 생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선배는 후배에게 악습을 강제하고, 후배는 다시 선배가 되어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를 대물림한다.

셋째, 휴대전화 압수, 두발 제한, 새벽 운동, 통금 시간, 외출 및 외박 등 '일상 전반에 걸친 통제'다. 후배는 선배나 지도자에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폭력적 통제의 정당화 방식은 매일 함께 생활하는 학교운동부 특성상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문화를 바꾸어내는 일

새로운 문화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첫째, 구시대 문화의 잔재를 끊어야 한다.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스포츠 문화는 선후배 간의 엄격한 위계 서열을 바탕으로 운동 관련 지시나 지도에 대한 복종, 승리를 강요하는 운동부 상황을 우선시한다. 만약 후배가 선배의 지시를 거부하면 집합, 욕설, 괴롭힘, 따돌림 등의 폭력 행위가 이어진다.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아직도 통제를 '운동부의 전통' 정도로 생각하는 낮은 인권 감수성이 자리한다. 구시대의 어두운 스포츠 문화 속에서 운동만 강요하며 타인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력이 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

둘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폭력적 문화는 엄격한 통제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게 만든다.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으며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문화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때로는 법·제도보다도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 선수가 각자의 책임과 자발성을 토대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운동부 문화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엘리트 스포츠 문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두운 스포츠 문화를 걷어내는 일은 일부 용기 있는 선수나 인권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밝고 긍정적이며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기대한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쌍둥이 자매 등록 포기까지... 갑판질판 여론 눈치만 본 흥국생명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결국 학창 시절 폭력(학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재영·다영(이상 25) 쌍둥이 자매와 다음 시즌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2021-2022 프로배구 정규리그 선수 등록 마감일인 30일, 흥국생명은 구단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선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화해를 기대하였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 두 선수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등록 포기 사유를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벌어졌을 정도로 여론이 나뉘기에 흥국생명 구단의 결정은 '팬심'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기 구단 흥국생명의 주전 레프트와 세터인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폭 사건은 프로 스포츠 전반으로 확산한 파문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올해 초 한 온라인 사이트에 학창 시절 쌍둥이 자매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흥국생명을 비롯한 배구계는 순식간에 숙대밭이 됐다.

흥국생명은 2월 15일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배구협회도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했다.



다음 장 계속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한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은 스스로 잔여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배구협회는 송명근의 대표 자격도 박탈했다.

배구가 도화선이 된 스타 선수들의 학폭 사건은 이후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주목할 점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대응과 해당 선수 소속팀의 대처 방식이다.

학창 시절 후배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축구 선수 기성용(FC 서울)은 변호사를 내세워 곧장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실 규명에 방점을 찍은 FC 서울 구단도 기성용의 경기 출전을 막지 않았다.

역시 학폭 논란 당사자인 투수 이영하(두산 베어스)는 단체 집합 때 선수단 기강을 잡으려 한 적이 있고, 후배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와 피해자라고 밝힌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영하는 구위 저하로 고전 중이나 경기에는 문제없이 나선다.

송명근은 진정 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고 소속 구단인 OK금융그룹과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도 했다. 그는 7월에 입대해 2023년 코트로 돌아온다.

납치·감금·집단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상하는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에서 은퇴한 뒤 법적 소송 끝에 허위 폭로라는 점을 밝혀내고 현대캐피탈로 복귀했다. 다만 친구와 후배들을 구타한 점은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폭 가해자인 선수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구단이 함께 움직여 공동 대응한 사례와 달리, 흥국생명도 이도저도 아닌 행보로 사태를 키웠다.

배구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그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넉 달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 측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지난 시즌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도 구단 이미지를 내세워 반대했다.

그렇다고 쌍둥이 자매와 피해자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다. 구단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면 쌍둥이 자매와 단칼에 결별할 수도 있었지만, 다음 시즌에도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해 세상이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여론 눈치만 살폈다. 그러다가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흥국생명은 다급해졌다.

흥국생명은 이재영은 팀 복귀, 학폭 가해자로 더 큰 비판을 받은 이다영은 해외 진출로 가닥을 잡고 물밑에서 움직였다.

김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22일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선수 인권 센터 발족을 제안하면서 쌍둥이 자매를 2021-2022시즌 선수로 등록하겠다고 각 구단에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선수 등록 움직임에 비난이 쇄도하자 흥국생명은 28일 입장문을 내려다가 숨을 고른 뒤 30일 결국 등록 포기 결정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못한 쌍둥이 자매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뒷짐만 진 채 사태를 이 지경에 몰고 온 흥국생명 구단의 책임도 절대 작다고 볼 수 없다.

KBO 신인드래프트 접수... 학폭 서약서·고교 생활부 제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부터 2022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인드래프트부터는 신설된 규약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 중 KBO 신인 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명 대상자가 된다.

신청 대상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선수, KBO 규약에 따라 지명 참가가 허용된 선수 중 지명 참가를 희망하는 자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지명 예정일은 1차 지명은 8월 23일, 2차 지명은 9월 13일이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KBO 신인 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가 월급 주는데 감독이 왜 갑질 하나요?”

강타자만 전학보낸 '이상한' 감독



2019년 1월 타이완 전지훈련, 사진 속 A 선수는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흠먼지가 뒤섞여 진흙을 칠한 듯했고, 유니폼은 온통 모래투성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전년도 타율 3할9푼1리, A군은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프로에 진출해 유명 메이저리거 '매니 마차도' 같은 선수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이 모 감독은 A 선수를 벤치에만 앉혀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 감독의 연봉인상 요구(7천만 원→9천6백만 원)를 A 선수 아버지가 앞장서 반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감독과 함께 일했던 코치 3명은 이구동성으로 "애는 잘하는데 학부모가 시끄러우니 전학을 보내야겠다"는 말을 이 감독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듬해 또 연봉 인상을 요구(9천6백만 원→1억 2천만원)하면서 또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 밖에 난 학부모의 아들, B 선수가 보복 대상이 됐습니다. 1학년임에도 주전을 꿰차며 팀내 최고 타자로 활약했던 B 선수는 투명인간이 되어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감독은 학부모들이 3학년 위주로 출전 명단을 짜달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전지훈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2019, 2020년)의 타이완 전지훈련에서 '혼자만' 비즈니스석을 타고 스위트룸에 묵은 겁니다. 감독은 MBC 취재진에게 "여행사가 감독의 예우 차원에서 해준 걸로 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전지훈련 대행사 관계자는 "감독이 직접 요구한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MBC의 '갑질 야구감독' 보도에 많은 분들이 공분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기사 4건을 합쳐 127만회가 넘었고, 댓글도 8천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그 중 가장 많았던 댓글 2개를 뽑아봤습니다.

"감독 월급을 학부모가 준다고요?"

야구 감독 월급을 학부모가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부모가 월급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찢찢매느냐는 건데요.

이 감독이 몸담고 있는 인천 OO고 야구부의 1년 예산은 4억 원이 조금 넘는데, 83%인 3억 4천만 원 정도를 학부모 40여 명이 십시일반 모아서 냅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원금도 있긴 하지만, 전국 대회 경비(버스비+밥값)를 내고 나면 끝입니다. 운동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감독과 코치들 월급인데, 모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초중고를 거쳐 운동선수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1억 안팎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결국 감독*코치들 월급 대느라 학부모 허리가 휘는 셈입니다.

돈을 내면 갑일 것 같지만, 학교 운동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출전 시간 때문입니다. 누굴 출전시키고, 누굴 뺀지는 감독이 정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감독이 내보내지 않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경기에 나오지 않는 선수라면 프로구단의 스카우터들이 알 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 진출도 요원해집니다. 선수의 미래는 '출전시간'에 달렸고, 출전시간은 감독이 정합니다. 이 정도면 '신'이라고 불릴만합니다.

감독이 출전권을 제대로만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천 OO고 사례처럼 출전권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경우입니다. 실제 감독이 출전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이나 외제차 등을 받는 등 출전권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계속

"학교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 감독이 보복성 출전 배제를 일삼고, 또 전지훈련에서 호화생활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학교는 뭘 했느냐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전국 초중고 3천948곳에서 5천284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5만 6천514명에 달합니다. 학교 운동부 감독의 정식 명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입니다. 임명 주체가 학교장인 만큼 당연히 관리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12조를 4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측이 제대로 운동부 감독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 OO고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죠. 야구 쪽은 학부모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저도 뭘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사실 잘 전달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계약만 제가 하는 거지.."

특히 '보복성 출전배제'의 경우, 스포츠 비전문가인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출전 배제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 감독은 '정상적인 기용이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학부모들의 감독 해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이 화두인데.. "기록 의무화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김대희 교수(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는 "학교체육진흥법이나 대한체육회 징계 규정에도 '선발권 남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는 공정이 화두고 사회 모든 분야의 선발을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운동선수들의 출전 기회는 감독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입시비리도 마찬가지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선수 출전권, 선발권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합니다. 가령 연속적인 출전 배제의 경우 감독이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거 보면 지금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진짜 야구를 잘해서 간 걸까?"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출전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대학, 프로 선수들이 정말 실력대로 뽑힌 게 맞느냐는 겁니다. 체육계가 고교 야구 감독들의 '보복성 출전배제'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단 '트레이드 갑질' 이젠 끝... 4개 스포츠 표준계약서 적용

"내 얘기는 아무도 몰랐으면 해. 창피하고 못났고 한심하니까..." 지난해 7월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이 25세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서는 자책으로 끝나 있었다. 소속팀 현대건설이 자신과 계약을 해지한 뒤 임의탈퇴 신분으로 묶어 버리는 동안 별 대응도 못 하고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나버린 데 대한 토로였다. 유족이 구단주를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유민의 죽음은 국내 프로구단과 선수의 관계에 작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구단이 '갑'으로서 사실상 선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관행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고유민 정도의 충격을 준 이는 드물었다. 약 11개월 뒤인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종목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 고유민 사태 당사자인 배구계를 시작으로 개막 준비 중인 농구, 시즌이 진행 중인 야구와 축구도 이를 적용할 전망이다.

팬들에겐 체감이 적을지언정 표준계약서 도입은 구단과 선수 입장에서는 판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정부가 선수 보호를 위해 직접 기준선을 제시한 예는 드물다. 달리 말해 종목마다 정도 차는 있을지언정 국내 관행이 선진 리그에 비해 비합리적이었다는 이야기다. 국민일보는 지난 24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 실무자,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만났다.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조상준(왼쪽) 과장과 표준계약서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무엇을 얼마나 바꿀까

표준계약서 도입은 문체부가 문재인정부 들어 예술 분야부터 박차를 가한 일이다. 예술계에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은 프로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피고용 관계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체부는 앞서 12개 분야에 표준계약서 69개를 도입했다. 공정을 내세운 국정 기조에 맞추려는 시도다.

다음 장 계속

프로스포츠 분야 실무부서인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조상준 과장은 “고유민 사태 등 연맹과 구단, 선수 간 계약 관계에서 문제 사례가 누적됐다. 표준계약서는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사무관은 “종목마다 입장이 다르기에 정부에는 굉장히 (개입이) 부담스러운 얘기”라면서 “그렇지만 문제가 반복되니 정부가 바람직한 계약이 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과정은 지난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야구, 축구, 남녀 농구, 배구(배구는 한 단체가 남녀 총괄)까지 5개 분야 선수·구단·연맹과 연 간담회·공개토론회만 16차례에 달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건에 변호사 8명이 달라붙었다. 김 사무관은 “기존 연맹별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니 규약·규정에 연동된 게 너무 많았다”고 했다.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변호사들조차 종목별 규약집을 찾아봐야 이해할 정도였으니 선수들에게는 이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했다.

‘트레이드 파동’ 이제는 없다?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트레이드 파동’은 종목을 막론하고 벌어졌다. 구단이 선수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선수를 맞바꿀 수 있게 한 게 주된 원인이다.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창설된 계기도 트레이드 건이었다. 양준혁은 1999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됐다. 양준혁이 트레이드를 거부하자 해태는 그를 임의탈퇴 공시한다고 경고했고 양준혁은 결국 트레이드를 받아들였다.

프로축구에서는 근래 큰 파문이 일었던 남준재의 예를 들 수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프랜차이즈급 스타 공격수였던 그는 2019년 7월 인천 구단에 의해 제주 유나이티드로 트레이드됐다. 구단이 자신에게 일언반구 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남준재가 항의하자 팬들은 구단이 선수를 푸대접했다며 들고 일어났다. 구단은 에이전트를 거쳐 선수 입장을 사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진실공방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는 진행됐다.

표준계약서에서 종목을 막론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도 트레이드다. 구단이 트레이드를 시도할 시 선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선수 요청시 사흘 이상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새 표준계약서 트레이드 항목의 핵심이다. 트레이드 계약 체결 시 선수에게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야구는 ‘협의’라는 표현을 2001년 공정위 시정조치를 거쳐 사용해왔다.

다만 ‘선수와 협의’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표준계약서에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면 선수 동의가 확실히 전제됐겠지만 구단들 반발이 심했다. 임 변호사는 “트레이드 시장 자체가 동의를 전제 않고 만들어졌기에 당장 도입하면 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구단 쪽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하면 협상력이 큰 선수는 이를 ‘합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선수들 입장에서 큰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만나본 선수들의 입장은 ‘최소한 알려주기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에 가까웠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관은 “표준계약서가 의도한 건 구단이 선수를 물건처럼 비인간적으로 바꾸는 일만은 막는 것”이라고 했다. 트레이드가 선수 의사에 반해 진행되더라도 선수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에 따라 최소 3일은 주게 했다.

‘임의탈퇴’라는 칼

트레이드 못지않게 주목할 건 임의탈퇴 제도의 변화다. 본래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 선수 신분을 내려놓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구단이 말 안 듣는 선수를 출전도, 이적도 못 하게 묶어두는 징계 조치로 남용됐다. 표준계약서는 기존의 ‘임의탈퇴’ 대신 ‘임의해지’라는 용어를 쓰게 하고 선수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게 확인되면 즉각 효력이 사라지게 했다. 효력은 사실상 무기한이던 것을 3년으로 제한했다. 그간 징계 수단으로 쓰이던 해당 제도를 원래 목적대로 ‘선수와 구단 간의 은퇴 약속’에 맞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다음 장 계속

가장 큰 충격을 줄 분야는 배구다. 배구 스타 김연경이 2013년 흥국생명과의 갈등을 겪으며 임의탈퇴를 ‘당했던’ 일이 일례다. 각 연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프로배구 임의탈퇴 공시 사례는 최소 서른 번이 넘는다. 여자농구도 10여 차례로 6개 구단인 리그 규모를 고려하면 많다. 다만 역시 10여 차례 임의탈퇴를 공시했던 프로야구계는 표준계약서의 효력 기간 제한 3년이 기존 ‘보류권’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이를 홀로 제외했다.

각 종목은 서류상으로 임의탈퇴 시행 시 선수의 동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징계수단으로 쓰여온 걸 감안하면 말뿐인 제도에 가까웠다. 표준계약서에 선수 동의가 필수 사항으로 명시된 만큼 선수들은 앞으로 구단과 연맹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해지 했음을 증명하면 즉각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프로축구는 아예 이번에 관련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초상권 문제도 핵심이다. 앞서 게임 초상권 사용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야구가 특히 그렇다. 표준계약서는 1차적으로 초상권이 선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선수 활동 관련해서만 이를 구단에 넘기는 것으로 규정했다. ‘선수 활동’의 범위도 경기와 훈련, 팬서비스 등으로 명확히 정했다.

선수는 구단과 사전 협의만 한다면 선수 활동과 관련 없는 공식행사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는 구단·연맹 이미지 실추, 혹은 선수 활동에 명백하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제한한다. GS 스포츠단 소속 선수가 삼성전자 홍보 행사에 출연한다든지, 훈련 기간에 즈음해 10박 이상 장기간 원거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계약서

표준계약서가 주 대상으로 삼는 건 목소리 큰 스타 선수들뿐만이 아닌, 엔트리를 구성하는 평범한 선수들이다. 임 변호사는 “고교·대학을 막 나온 신인들은 협상력이 거의 없다. 일반 사회라면 노조가 도와줘야겠지만 비슷한 성격인 선수협회조차 야구·축구 외엔 없기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과장은 “기본적으로 선수들 스스로도 인식을 바꾸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중 해설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임 변호사는 “표준계약서 자체에도 선수와 구단의 의무를 가독성이 높게 먼저 제시해놓았다”면서 “선수 인권 보장의 기능도 있지만 선수와 구단이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무를 숙지하는, 교육적 기능도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각 연맹이 규약 등에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는지 점검해 지원금 등에 반영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 긴급사태 선포 가능성”

앵커

도쿄 올림픽 개막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코로나 19 확산세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중 '긴급사태'가 발령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반까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 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16% 많은 수준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18명이 보고됐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15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확진자는 약 4천명으로, 증가폭은 직전 일주일보다 22% 확대됐습니다.

오는 23일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일본내 확진자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방역단계인 현 '중점조치'를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오는 12일 이후에도 연장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대 1만 명으로 설정한 경기장 입장객 수용 한도를 5천 명으로 줄이고, 입장권을 5천 장 이상 판매한 야구, 축구, 육상 등 대규모 경기를 무관중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당국자는 올림픽 개최 도중 긴급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도쿄올림픽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선택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아베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는 反日행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이들을 ‘반(反)일본’ 세력 이라고 일컬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최근 발매된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의의를 강조하고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올림픽의 의의가 “감동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인끼리의 유대를 서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며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마주하고,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드는 일본이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일본에는 그럴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아베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현 상황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성공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공산당으로 대표되듯이, 역사 인식 등에 있어서도 일본 ‘반일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개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본 각 계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17선의 거물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트위터를 통해 “(아베 전 총리는) 4년 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런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고 외쳤다. 국민을 결집시키기는 커녕 멋대로 낙인찍기 식으로 갈라놓는 게 그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지목한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는) 자신에 반대하면 반일 딱지를 붙인다.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한 나라의 총리까지 맡았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간 겐다이는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강행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나 의료 붕괴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념적 대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다”며 “아베 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중단이나 연기를 요구하는 67%의 사람이 반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여성 매체인 조세지신(女性自信) “지난해 3월 주변의 ‘2년 연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1년 연기’를 제안한 사람이 아베 전 총리”라며 애당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열게 된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합숙소 사생활 보호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청취

<https://www.mhs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50>

이용 의원 “체육계가 먼저 나서 잘못된 관행·악습 근절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6281841003&sec_id=530101&pt=nv

[집중취재M]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 무소불위 '감독의 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503_34936.html

한국프로스포츠협회, 'OTT 플랫폼용 프로스포츠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자 입찰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70508361595732>

[기자수첩] 스포츠인과 스포레기... 그럼 당신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48011>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산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7031500003&sec_id=530101&pt=nv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저연봉 선수 수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099100007?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스타트업 제품 전시·체험전 개최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1070111503747437>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